

# 국힘 “증인 없는게 뉴노멀?”… 다주택·모두의 창업 등 충돌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 전 주택 4채 중 3채는 처분한 “다주택 관련부분, 죄송스러워”

여야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맹탕”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이 전무했던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 재직할 당시 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이 뇌물 공여 의혹이라고 보고 당시 관련 인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맹목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자료 요청이 가득했다”며 “30년간 한철 내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고등학교 성적은 왜 필요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불법 증축 등 최근까지 제기된 한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 ‘모두의 창업’ 개인 정보 유출사고 등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

당은 한 후보자의 경험·이력을 토대로 총리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몸을 낮췄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게 아니겠나라며 다주택자를 비판한 발언을 겨냥해 “청문회 이틀 남기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겠다”며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장관 인사청문회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으로 살았던 시절과 공직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모든 다주택 관련된 부분은 계속 매물로 내놓으면서 팔려고 애를 썼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4채 중 3채를 처분하고 현재는 삼정동 소재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도

마에 올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내준 심각한 참사”라며 관련 자료를 오전 중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고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보자 농지 관련 양평군에서 불법적 (건축물 설치) 시정 공문을 보냈음에도 미이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관련된 공문이 발송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후보자는)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까지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규택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한 후보자 지명) IT 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추진력, 전문성, 또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사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李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만들어 낼 것”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韓 지킬 것 명예롭고 안정된 삶 이어지게 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면서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면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용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0일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들도 있으면 안 된다면서 “76년 전 참호 속에서 피로 맺은 우리의 연대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싸운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 전쟁 기념식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5주년 기념행사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10년 단위가 아닌 해의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서예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특검 촉구 거부, 정권침몰 도화선”

국힘 장동혁, 국회 최고위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면서 “특검 거부는 정권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전날(24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바 있다.

장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수본을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장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다.

장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이재명·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나온 것에 대해 “특검 수사에는 이렇게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잣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장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선관위 노동조합에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를 하자는 개혁안을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선거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실무진들의 의견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겠나. 공정한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 李, 내달 1일 文 전 대통령과 靑 오찬

6·3 선거 이후 당권갈등 통합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최근 여론에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는 7월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날 오찬에 불참한다. 이에 김해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만 오찬을 함께 한다.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이 열렸던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조우한 바 있다.

이번 오찬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유력순방 결과나 민생·경제 상황 등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만남은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 행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오찬이후 지지층을 향한 통합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 기자

## “지방에 기회주는 법 개정 서두를 것”

>> 1면 ‘반도체 성장 효과…’서 계속

그러면서 “채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조만간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재계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인 외 호남-충청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논의가 후반부로 와서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2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을 고려 중이라는 질문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고 인정했다.

이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뺨 하나 있는데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력과 용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2044년에 짓기로 한 것을 2034년까지 10년을 당겼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당겨야 한다고 본다”며 “2048년까지 계획돼 있는 삼성도 2034~2035년까지 당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이유는 앞날을 대비해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은 더 이상 부지도 마련하기 어렵고 전력·용수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예진 기자